

발전공기업, 정규직 채용위한 별도 공기업 ^또 만든다

민간업체 근로자 공기업 관리
정규직 구체적 전환방식 눈길
민간업체는 사업기반 사라져

정부와 여당이 태안화력 설비점검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가 담당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직고용을 약속했다. 그동안 민간업체에 맡겨온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향후 공기업이 직접 담당하고 해당 민간업체 근로자들을 공기업이 관리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존 공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국내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이 세워진다는 점을 감안,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이 어떻게 이뤄질 지 눈길을 끈다. 정규직 전환 이후의 처우개선도 과제로 남는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5개 발전사 전환 대상을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 고용하겠다"는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 방



당정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합의를 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준식 시민대책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식,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분야 인력은 2017년 6월 말 기준 5개 민간업체, 총 2266명이다. 비정규직 436명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업체의 정규직이다.

한전산업개발 인력이 1702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발전기술 300명, 수산인더스트리 142명, 금화PSC 73명, 일진파워 49명이다. 이들 인력은 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회사 정원(1만1800여명)의 약 19%에 해당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이들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5개 발

전 자회사가 함께 출자하는 통합 자회사나 한전의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 한전이 2대 주주인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분의 31%, 한전이 29%를 갖고 있어 한전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 이미 한전 산업개발은 전체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의 약 75%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 인력을 고용할 공공기관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이 없으면 허울뿐인 정규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전사는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전산업개발의 평균 급여는 4861만2000원, 한전의 발전정비 자회사인 한전KPS는 7439만9000원이다. 한전KPS의 평균 근속연수가 14.7년으로 한전산업개발의 8.1년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도 상당한 급여 차이가 있어 보인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은 공기업 직고용이 확정됐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경상정비는 인력도 더 많고 정부가 20여년

전 한전KPS 과업을 계기로 민간업체를 정책적으로 육성해왔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은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8월 말 기준 경상정비 인력은 총 5286명으로 공기업인 한전KPS가 2195명, 민간업체가 3091명이다. 한전산업개발과 금화PSC, 일진파워 등 8개 주요 민간업체가 2505명을 고용하고 있다.

만약 경상정비까지 공기업이 직접 고용하게 되면 임금과 직원 등 사업 기반이 사라지는 민간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업체들은 아직 이번 정규직 전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전산업개발 정도를 제외하면 연료·환경설비 운전 사업 비중이 크지 않고 공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따내야 하는 입장이라 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업체의 총인력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전산업개발 60.9%, 금화PSC 93.5%, 수산인더스트리 34.2%, 일진파워 88.5%, 한국발전기술 69.3% 등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시범사업 추진 '통일 영농형 태양광' 업무협약



'통일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박정 국회의원, 표영준 한국동서발전 사업본부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발전·박정 의원·파주시

'통일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한국동서발전과 파주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통일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반도 화합과 평화통일시대의 에너지·농업분야 남북교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동서발전은 경기 파주시청에서 최중환 파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농사를 병행하는 시스템이다. 작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분의 일조량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2010년대부터 중국·일본·독일에서 활발히 시행중이며 최근 국내에서도 농가소득과 재생에너지 설비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동서발전은 파주시 내 적정 농지를 모집해 100kW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3개소를 설치하는 등 시범사업의 총괄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준공 후에는 해당 설비를 지역사회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부지선정,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영농데이터를 분석해 파주시에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마련한다. 또 박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20년 동안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파주시 '통일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태양광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농촌발전은 물론 파주시 내 농업 관련 남북교류활동에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에너지 분야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남북 최접경지역인 파주시의 거리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영농형 태양광 설치 사업이 선도 사례로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동서발전이 보유한 화력발전소 주변 농촌지역에도 '나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태양광설비를 지원해 지역사회와 수익 공유는 물론 안전과 환경 등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난해 원전 이용률 37년만에 최저... 올해는 반등

부식 등 정비 마치고 전력생산 시작
한수원, 올 원전 가동률 예년수준 회복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원전 이용률이 올해에는 4년 만에 급반등할 전망이다. 철판 부식 등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이 정비를 마치고 하나둘 다시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원자력 발전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8년 원전 이용률은 65.9%를 기록해 1981년의 56.3% 이후 가장 낮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은 연간 최대 가능 발전량 대비 실제 발전량의 비율로 가동률(연간 시간 대비 실제 가동 시간)과 비슷한 개념이다.

2015년 85.3%,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등 원전 이용률은 최근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이용률

이 하락한 이유는 콘크리트 공극과 철판 부식 등의 문제가 다수 원전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서 통상 약 2개월이 걸리던 주기적인 계획예방정비가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진 원전도 있었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여기에 현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안전 검사를 더 까다롭게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방정비일수가 감소하면서 원전 이용률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비일정과 신한금융투자가 올 초 발간한 '유틸리티' 속보에 따르면 올해 전국 23기 원전들의 예방정비일수는 총 1422일로 지난해 2823일 대비 절반 수준이다.

신한 유틸리티는 올해 원전 가동률이 83.3~84.8%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 유틸리티는 "2018년 한수원의 정

비일정이 매달 크게 늘어났으나, 2019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비일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안전 관련 전수 검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은 2015년 16만4762GWh(기가와트시)로 정점에 달했다가 점차 하락해 2017년 14만8427GWh까지 내려왔다. 2018년 1~11월 발전량은 12만1075GWh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운영허가를 내린 신고리 4호기 등 신규 원전이 올해부터 진입하면 발전량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에너지 수급 브리프'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호기(총 2.8GW 규모)가 올해 시점에 진입, 원전 설비용량이 25.3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전 발전량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 분석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광물공, 유연탄 등 6대 전략광물 '투자위험지표' 개발

〈한국광물자원공사 토종 지수 개발 사례〉

연도	지표명	설명
2017년	광물종합지수 (MinDex)	국내 수요 15개 광종의 종합가격변동지수
2018년	희유금속 가격예측시스템	리튬, 몰리브덴 등 x개 희유금속의 최대 10년치 예측가격 제공
2019년	시장전망지표 (MOI)	국내 수요 6개 광종 가격 추이와 전망, 투자환경을 반영한 5단계 투자 위험도 제공

광물자원의 해외 투자 위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6대 전략 광물인 유연탄, 우라늄, 구리, 아연, 니켈, 철광석에 대한 투자리스크지표인 '시장전망지표(MOI)' 개발을 끝내고 이달 말부터 자원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MOI는 광물공사가 20년간 축적한 6개 광물의 ▲과거 가격추이 ▲투자환경 ▲미래 가격전망 데이터베이스와 독자 개발한 산식을 활용해 표준화된 지표로 개발한 것으로 투자자는 0부터 100까지의 MOI 값을 보고 5단계 구간(위험~기회)으로 구분된 투자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세계 메이저 자원개발기업들이 광산 투자를 확대

했던 2000년대 초반 전기동(구리원광의 가공형태)의 MOI값이 80이상인 '기회' 단계로 나타나는 등 신뢰도도 확보했다.

MOI는 월 1회 자원정보서비스를 접속하는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남윤환 광물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국내 실정에 맞는 토종 시장지표 개발을 통해 기존 해외시장 전문가에 의존하던 원자재 투자자들의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광물전문정보 제공을 통해 침체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물공사는 2016년 광물종합지수(MinDex)를 시작으로 희유금속 가격예측시스템(2017년), 시장전망지표(MOI)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며 민간의 투자리스크 경감을 위한 전문정보제공에 나서고 있다. /김승호 기자